"지난 반세기 혁신가전 태어난 곳… 이젠 AI홈 시대 전략거점"

LG전자, 가산 R&D 캠퍼스 50주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 '종합 연구소' 실험동·별관 준공, 1700여명 상주 가전제품 넘어 부품·신소재 등 연구 美 발명상 '에디슨 어워드' 최고상

LG전자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R&D 캠퍼스'에서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오세기 ES연구소장, 김민수 서울대 교수, 이감규 전부사장, 송대현 전사장, 이영하 전사장, 김쌍수 전부회장, 신문범 전사장, 전시문 전부사장, 최경민 부산대 교수, 이현욱 HS연구센터장, 이재선 유니스트 교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지난 1975년 설립한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종합 연구소인 '가산 R&D 캠퍼스'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LG전자는 지난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가산 R&D 캠퍼스에서 '50년의 기술과 열정, 내일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지난 50년간 함께 일궈온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 반세기 혁신을 향한 미래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LG전자는 지난 1975년 12월 보다 체계적인 연구 거점 마련 및 연구소 간 시너지를 위해 '금성사 중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가산 R&D 캠퍼스를 설립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개별 공장 내 소규모 연구조직을 운영하던 당시, 가전, 컴퓨터 등 제품군을 모두 아우르며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 생산시스템 자동화 등을 전담하는 민간기업 첫 종합 연구소다.

단층 건물에 전기 계측, 제어, 표준 등 실험시설을 갖추고 출범한 연구소는 2002년 압력, 온도, 소음 등 다양한 실험실을 갖춘 실험동을 신축한 데 이어, 2007년 지상 20층·지하 5층 규모의 연구동, 2013년에는 별관을 추가로 준공해 현재 전체 연면적은 3.5만 평에 달한다. 개소 당시 수십여 명이었던 상주 인원도 현재 1700여 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혁신적인 가전제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1998년 세계 최초 벨트 없이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한 DD모터와 2001년 모터가 회전 대신 직선운동을 하는 냉장고용 리니어 컴프레서가 대표적이다.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으로 LG가전의 핵심 부품 기술력을 입증했다. 2016년 선보인 국내 최초 듀얼 인버터 에어컨은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 높이며,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 최고상을 받았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기능성 신소재, 플랫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속 회전모터·인버터 실험실, 미생물·위생 실험실, 선행플랫폼 실험실 등 다양한 연구·실험실은 물론, 의류과학연구소, 공기과학연구소 등 특화 연구 시설과 소재 연구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와 용량의 HVAC 컴프레서 ▲기능성 신소재 '유리파우더' ▲차세대 가전 플랫폼 등 LG전자의 미래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LG전자 HS연구센터장 이현욱 부사장은 "지난 50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AI 홈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 거점이자,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보이는 R&D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외국인 집 살때 자금출처 등 꼼꼼히 따진다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토허구역 투기성 주택 구입 사전방지 체류자격·주소 등 신고내용에 포함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입증서류를 갖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매수 전에 체류자격이나 주소 등 신고 내용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내용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샀다면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역시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3개월(2025년 9월~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통상환경 악화 '석유화학' 민관합동 대응

산업부, 석화업계 통상현안 간담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장 다변화, 미래 경쟁력 뒷받침"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반덤핑·상계관세, 환경·인증 강화 등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의 구조개편과 통상파고가 맞물린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EU와의 고위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의회와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까다로운 환경·인증 기준 확산 등 국내 석유화학 수출환경이 급격히 경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업계 전반에서 사업재편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통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석화 수입규제 조사 대응 시 양자협의·서한발송·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대응 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통한 비관세장벽 발굴·분석 및 개선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화학 품목 관세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시장 다변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빈곤층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상반기 중 로드맵 내놓기로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족 소득을 제외하고 수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 여부만 보기로 했다.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 도입 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도 내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했다가 단계적으로 완화돼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실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10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소득이 67만원인 A씨에게 자녀 부부가 있으면 이 부부 소득 기준의 10%로 36만원만 추가돼도 합산 103만원이 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는 자녀부부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 67만원만 적용돼 A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2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